

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- 최진식 중견련 회장 ‘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’ 참석 (11.9)
 -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여 ▲디지털 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, ▲해양 수산 규제혁신 추진 방안, ▲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등에 관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, 규제혁신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
- 최진식 중견련 회장-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면담 (11.10)
 -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1.10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견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 및 국내 유니콘 기업의 성장 등을 위한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
-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한 공동 성명 (11.22)
 -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, 수출기반산업의 약화 등을 초래하므로 차주-운송업체-화주가 윈-윈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
- 중견기업 전용 무역·통상 지원 센터 출범 (11.28)
 -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공급망 다면화 등 급격한 무역·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‘중견기업 무역·통상 지원센터’ 출범
-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견기업 애로 접수 센터 운영 (11.30)
 - 11.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견기업 애로 접수 센터 운영

정책동향

- [산업통상자원부]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(11.1)
 - 민·관이 함께 ▲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, ▲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, ▲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핵심과제 이행과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0% 달성 및 50조원 이상 국내 투자 실현을 목표로 하는 「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」 발표
- [산업통상자원부]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(11.3)
 - 세계일류상품* 66개,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81개사가 신규 선정되었으며,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선정요건을 확대·개편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
 - * 수출 유망기업(현재일류, 차세대일류)을 선정, 해외마케팅, R&D, 금융 등 자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및 우대
-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(11.3)
 - 산업단지 디지털화, 저탄소화, 근로·정주 여건 개선, 안전 강화, 입지규제 혁신 등 5대 분야,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「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」 발표
- [해양수산부]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(11.4)
 - 해운운임의 급격한 하락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▲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, ▲해운시황 분석·대응 고도화, ▲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, ▲친환경 디지털 전환 선도 등 국내 해운산업 지원대책 마련
- [기획재정부]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(11.4)
 - 정부는 美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국제통상 규범 위반소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제출
- [산업통상자원부] 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개소 (11.8)
 - 중소·중견기업 제조제품의 성능평가 시험 상시 지원 및 공정개선 컨설팅, 기술개발 지원,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안전관리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‘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’ 개소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(11.9)
 - ▲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제고, ▲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, ▲디지털설비 활용 현장 애로 개선 등 3대 분야, 12개 과제로 구성된 「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」 발표
- [산업통상자원부]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(11.9)
 - 정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, 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(산업통상자원부), ②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(산업통상자원부), ③ 수소기술 미래전략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등 3개 안건 심의·의결
- [해양수산부]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(11.9)
 -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▲항만·해양공간 민간투자 촉진, ▲해양수산 신산업 육성, ▲수산업·어촌 자생력 강화 등 3대 분야, 7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「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」 발표

●● **[산업통상자원부]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(11.10)**

- 국내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 등 정부 차원의 탄산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「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」 발표
- (주요내용) 매년 상·하반기 원료탄산 공급사 정비일정 사전 공유, 국내 원료탄산 및 탄산 생산·세조 관련 설비 신·증설 프로젝트 집중 발굴 등

●● **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 중견기업 주간 (11.14)**

-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*을 맞아 11.15일부터 11.18일까지 다양한 연계행사 개최
*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중견기업계 사기 진작을 위해 2019년 지정된 법정 기념 주간
- (주요 행사) 한-독 중견기업 기술협력 파트너링(11.15),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점프 업(11.16),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(11.17), 세계일류상품인증서 수여식(11.18) 등

●● **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(11.18)**

-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‘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’ 활성화를 위해 사업 세부절차·기준, 사업유형, 서식 등을 정리한 「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(가이드) 1.0」 제작·배포

●● **[산업통상자원부]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37억원 추가 지원 (11.21)**

-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* 심의위원회에서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37억원(국비 241억원, 지방비 196억원) 지원 결정
*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소재기업의 신·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

●● **[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] 제1차 수출전략회의 (11.23)**

- 정부는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‘세계 5대 수출 대국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며 ▲수출전략회의 운영계획(안), ▲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(산업부), ▲사우디,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(산업부, 국토부) 등 논의

●● **[산업통상자원부] 뿌리기업 명가·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(11.23)**

- 뿌리산업에서 대를 잇는 전통확산을 위해 ‘뿌리기업 명가 및 ‘일하기 좋은 뿌리기업*’ 선정
* 뿌리기업 명가 : 대를 잇는 전통확산을 위해 20년 이상 경영, 가업승계기업
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: 근무·복지환경, 경영안정성,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

●● **[해양수산부] 수출입 물류 공공·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(11.24)**

- 수출입기업들이 선박 운항계획 및 현황, 터미널 운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적화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‘수출입 물류 공공·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’ 운영

●● **[기획재정부]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(11.24)**

- 새 정부 첫 번째 ‘배출권 할당위원회’가 개최되었으며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*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
* ① 온실가스 감축 유도, ② 배출권 시장 활성화, ③ 행정부담 완화, ④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

- [환경부]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(11.24)
 -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'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'을 제정하여 11.25일부터 시행
 - 온실가스 기준에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, 아산화질소 등을 포함하여 반도체, 디스플레이 공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
- [공정거래위원회]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(11.24)
 - ▲신산업 활성화·국민후생 증가, ▲중소사업자 창업·재창업 촉진, ▲사업자 부담 완화, ▲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 2022년 추진된 총 29건의 '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' 확정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메타버스 윤리원칙 (11.28)
 - 메타버스를 개발·운영·이용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이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 정화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가상사회 자율 규범인 「메타버스 윤리원칙」 마련
- 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-대학·공공기관 기술나눔 (11.28)
 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,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·중견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'산업통상자원부-대학·공공기관 기술나눔'을 11.28일부터 12.23일까지 모집
- [고용노동부]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(11.30)
 -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(0.29‰)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*과 1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 발표
 - * ▲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, ▲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·관리, ▲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·문화 확산, ▲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
- [기획재정부] 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출범 (11.30)
 -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「원스톱 수출·수주」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·수주 애로에 대한 맞춤형 해소, 예산, 세제, 금융, 규제완화, 마케팅, 물류, 통상 및 외교협력 등 수출·수주 쏠 주기 지원

입법동향

1 정부

-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개정안 (11.3)
 -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▲중소·중견기업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&D 과제 수 제한(중견 5개, 중소 3개) 규정 폐지, ▲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완화 추진

●● [환경부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1.8)

- ‘유독물질’이면서 ‘제한물질’인 화학물질*을 수입하기 위해 ‘유독물질 수입신고’와 ‘제한물질 수입허가’를 이중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‘제한물질 수입허가’ 절차만 이행하도록 시행령 개정

* 납, 카드뮴 등 13종

●● [공정거래위원회]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(11.14)

- 지급수단·기간별 지급금액 등을 규정한 「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」 및 과태료 가중·감경 사유를 구체화한 「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 제정안을 마련하여 11.14일부터 12.5일까지 행정예고

●● [공정거래위원회] 가중처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(11.16)

-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8개* 대한 해석순서, 위반행위 적발 시점 등을 구체화한 「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」 제정안을 마련하여 11.16일부터 12.6일까지 행정예고

* 가맹사업법, 공정거래법, 대규모유통업법, 대리점법, 방문판매법, 하도급법, 할부거래법 등

●● [환경부]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(11.28)

- ▲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, ▲보증금제 대상 일회용품 수집·운반 체계 개선, ▲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및 「건설폐기물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11.29일부터 시행

2 국회

●●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 의원, 11.1)

- 해외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,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제조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

●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 의원, 11.8)

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'22년 말에서 '27년 말로 연장하고, 공제율을 상향 조정*하여 세제 지원 강화

* (大) 3% → 9%, (中堅) 7% → 17%, (中小) 10% → 20%

●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 의원, 11.21)

-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 활동으로 연구·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

* (大) 10%, (中堅) 20%, (中小) 30%
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 의원, 11.21)
 - 중소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* 일몰기한을 '22.12월에서 '27.12월까지 5년 연장
 - * (中堅) 15%, (中小) 30%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정 의원, 11.22)
 -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'24.12월에서 '30.12월까지 6년 연장하고, 공제율 상향 조정*
 - *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: (中小) 40% → 60%, (그 외) 30% → 45%
 - 통합투자세액공제 : (大) 6% → 10%, (中堅) 8% → 15%, (中小) 16% → 30%
-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웅천 의원, 11.4)
 - 화력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
 - * (화력발전) kWh당 0.6원, (LNG발전) kWh당 0.3원, (열병합용 LNG발전) kWh당 0.2원 적용
-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(오기형 의원, 11.2)
 -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국내 판매금액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에 한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의무 도입 및 불공정거래행위기준, 분쟁해결제도,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(윤영덕 의원, 11.11)
 -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, 사전통지 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등 마련
-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(배진교 의원, 11.8)
 - 국내 월간 실제 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2만명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고,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위에서 감시하도록 함
-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 의원, 11.4)
 - 취업규칙 작성·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 신상정보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
-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 의원, 11.4)
 -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·질병의 경우에도 30일 범위에서 휴업을 보장하고,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함
-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재 의원, 11.23)
 -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·세척시간 부여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 의원, 11.4)
 -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 3권을 강화하고, 쟁위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등 마련
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 의원, 11.24)
 -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
-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(이수진 의원, 11.16)
 -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프리랜서,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포괄하여 보편적인 권리보장 법안 제정
-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(장철민 의원, 11.22)
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마련
- 자율운행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(이원택 의원, 11.4)
 - 자율운행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연구·실증·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등 규제 완화
- 자율운행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(권명호 의원, 11.22)
 - 자율운행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·실증·시범운행 등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
-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(윤관석 의원, 11.10)
 -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안 마련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 의원, 11.11)
 -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,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곤 의원, 11.15)
 -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 삭제
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 의원, 11.18)
 - 유효기간 10년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,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 의원, 11.21)
 - 청정수소 증명서의 발급·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 의원, 11.23)
 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'22.12월에서 '25.12월로 3년 연장하고,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

-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중 의원, 11.23)
 -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,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관석 의원, 11.25)
 -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시책을 추가하고, 긴급수급 안정화조정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및 공급망 블록화 지원체계 마련
-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 의원, 11.25)
 -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·중견기업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